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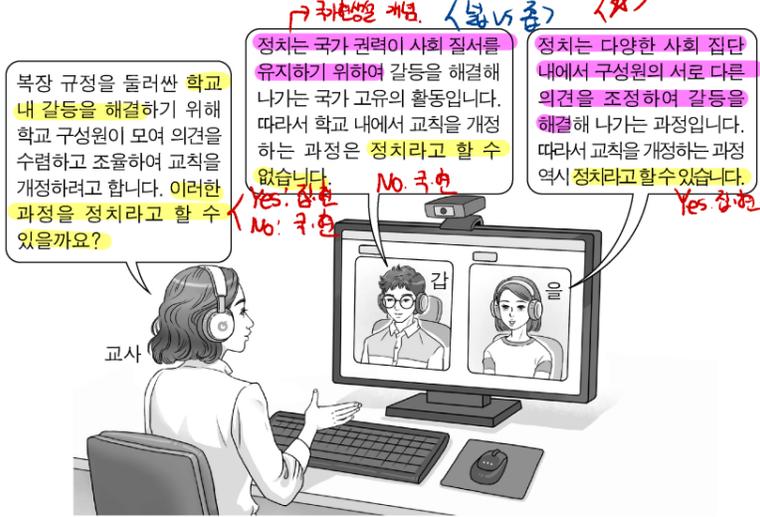
— : 당 Key Point
 — : 중요분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정치와 법)

성명 [] 수험 번호 [] 제 [] 선택

1.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에 나타나는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 ② 을의 관점은 국가의 정치 현상과 사회 집단의 정치 현상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 ③ 갑의 관점은 을에 비해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④ 을의 관점은 갑에 비해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갈등 해결 양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 ⑤ 갑, 을의 관점 모두 시민 단체가 정부 정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라고 본다.

Comment: 전형적인 보 vs 좁은세.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민주주의에서 국가 권력은 주권자의 의사가 집약된 법률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만든 법에 의해 구속되는, 국민의 자기 지배가 곧 법치주의이다. 그러나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나치의 행태가 보여 주었듯이 당시 나치 독일은 법률의 형식과 절차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形式法치)를 통해 비민주적인 체제로 이행하였다. 이후 법치의 본래 의미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을 단순히 형식적인 합법성에 구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요청되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목적과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법치(實質法치)로 확대되었다.

- ① A를 의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국가 기관과 국민을 구속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B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과잉 금지 원칙을 적용하여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통치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B는 A와 달리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 부합해야 국가 권력이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⑤ A, B 모두 위헌 법률 심사제의 도입을 반대할 것이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방 자치 제도는 지방의 공동 관심사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주민의 자치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국가 권력이 본래 국민의 것이라는 **권양원**에서 출발하여 국가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의 실현인 것이다. 한편 현대 사회에서 국가는 국민의 생활 능력을 강화하고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복지국가**의 실현과 관련된 국민 생활의 안정, 실질적 평등 실현의 필요성으로 인해 중앙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간에는 상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① (가)는 균형 있는 지역 경제 육성 정책의 근거가 된다.
- ② (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 투표제를 들 수 있다.
- ③ (나)는 개인의 자유 존중을 근본으로 하여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원리이다.
- ④ (나)의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가 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⑤ (가), (나) 모두 근대 입헌주의 헌법에서부터 강조되었다.

4. 기본권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조항은 국민이 재판과 관련된 집단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여 사실상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형사 소송에서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을 3일로 정한 **○○법률**의 해당 조항은 국민이 재판에 대해 불복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하여 **헌법 제27조**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 ① A는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② B는 다른 기본권 실현의 전제 조건이 되는 본질적 권리이다.
- ③ A는 B와 달리 헌법에 열거되어야 보장되는 권리이다.
- ④ B는 A와 달리 국가에 특정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있다.
- ⑤ A, B 모두 국가 성립 이전부터 인정받아 온 권리이다.

5.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시민 단체, 이익 집단,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신종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정당**의 보건 의료 정책에 관련된 공약의 평가를 발표하였다. 발표 자료에서 A는 신종 감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B의 정책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들로 조직된 **이익** B를 방문하여 신종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B는 정부가 특별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 ① A는 구성원의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한다.
- ② B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률안을 발의한다.
- ③ A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선거에서 후보자를 공천한다.
- ④ A는 B, C와 달리 대의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 ⑤ B는 A, C와 달리 행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며 정치적 책임을 진다.

Comment) ①번 인자가 권자만 볼 수 있지만 ⑤번 인자가 너무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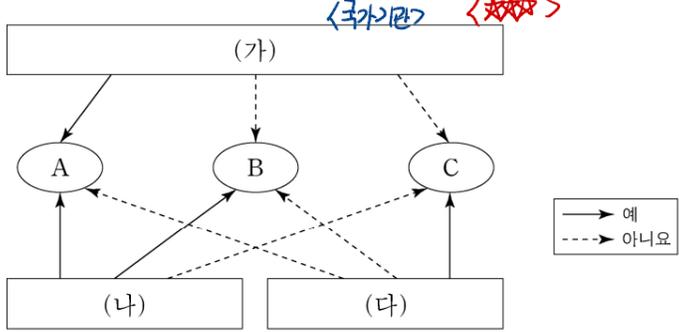
Comment: 통치권, 이사회 그와 관련된 중요점!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정치와 법

2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6. 그림은 (가)~(다) 질문에 따라 우리나라 국가 기관 A~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C는 각각 감사원, 국회, 대통령 중 하나이다.) [3점]



<보기>

㉠. (가)에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들어가면, (나)에 '헌법 재판소 재판관의 구성 권한이 있습니까?'가 들어갈 수 없다. *권대통령, 대법원*

㉡. (나)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습니까?'가 들어가면, (다)에 '국가 세입·세출의 결산 감사의 권한을 가집니까?'가 들어갈 수 없다. *국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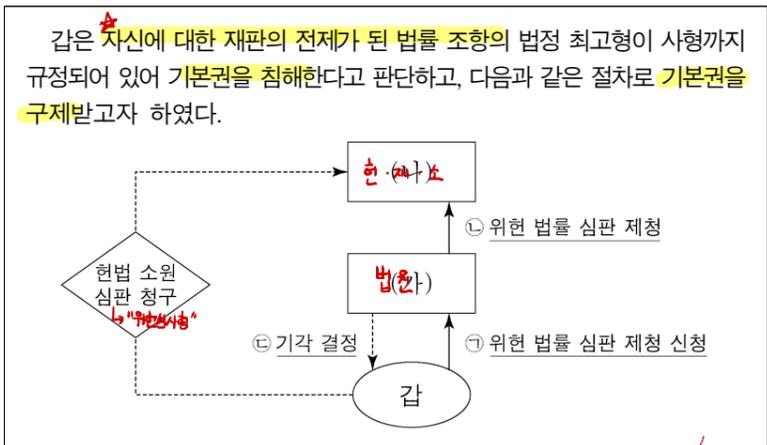
㉢. (가)에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 있습니까?'가 들어가고 (나)에 '헌법 개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까?'가 들어가면, 장(長)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다. *국회의장*

㉣. (가)에 '국정 감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가 들어가고 (다)에 '행정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합니까?'가 들어가면, 장(長)은 장(長)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감사원장*

- ① 가, 나 ② 나, 리 ③ 다, 리
 ④ 가, 나, 다 ⑤ 가, 다, 리

Comment: 기본 A~E의 권한 구분이 혼란을 주는 것은 17번의 구분이 혼란을 준다. 개념적 요소 지능이 없거나 혼란스러울 수 있다.

7.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와 (나)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관이다.) [3점]



- ㉠. (가)가 ㉠을 받아들이면 해당 법률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헌법소원*
- ㉡. (가)는 갑의 신청 없이 ㉠을 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 ㉢. (나)는 ㉠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는 권한으로 국회를 견제할 수 있다. *헌법소원*
- ㉣. 갑이 ㉢에 불복하는 경우 항고할 수 없다. *헌법소원*
- ㉤. (가), (나) 모두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심급 제도를 두고 있다. *단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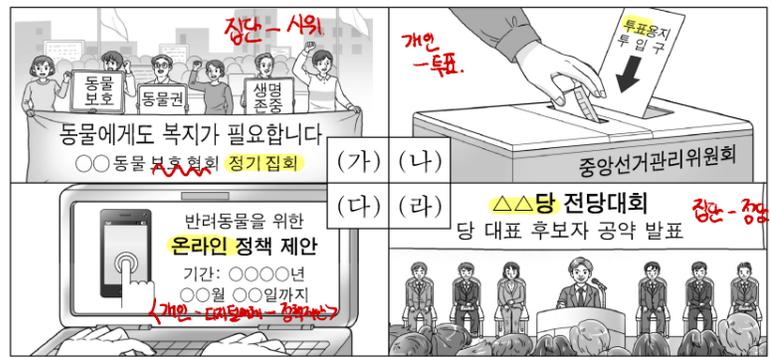
Comment: 답 안과 약간 다르게 기법으로 나머지 선택지 역시 제외되므로 답은 단심제이다.

8. 밑줄 친 ㉠~㉤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갑(28세)은 을에 대한 상해 혐의로 ㉠ 구속 수사를 받던 중, ㉡ 기소되었다. 갑은 ㉢ 1심 재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갑은 항소를 하였고, 2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가 상고를 하였지만 기각되어 ㉣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 단계 이전에 ~~갑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검사, 검사-구속과*
- ㉡. ㉡로 인해 ~~갑은~~ 소송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 *형사-피고인*
- ㉢. ~~㉢ 단계에서~~ 이르러야 비로소 갑은 진술 거부권을 가진다. *형사-피고인*
- ㉣. 갑이 형사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 시점에 ~~구속되어~~ 있어야만 한다. *comment: 전항 병 & 補*
- ㉤. ㉤ 이후 을은 배상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comment: 전항 병 & 補*

9. 그림은 정치 참여 방법 (가)~(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기>

㉠. (가)는 (나)와 달리 집단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집단-사위*

㉡. (나)는 (라)와 달리 정치 과정에서 투입 기능을 담당한다. *개인-투표*

㉢. (라)는 (가), (나), (라)에 비해 시·공간 제약이 적어 시민의 정치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집단-정책*

㉣. (라)는 (가), (나), (다)와 달리 정치 권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집단-정책*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리 ⑤ 다, 리

Comment: 이 보기는? 잘 생각해 보.

10. A~C는 근대 민법의 수정 원칙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구분	관련 법규	법적 원리 (수정 원칙)
계약 공평의 원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위험 부담의 원칙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이자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i>무관심원칙, 대외 사대, 대가, 무관심 원(원칙)</i>
소유 권리의 원칙	헌법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기>

㉠. A에 의하면, 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할 때 국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계약 자유의 원칙*

㉡. 임대 건물의 하자로 인한 행인의 부상에 대하여 임대인과 ~~에~~ 달리 건물 소유자가 면책되지 않는 것은 B가 적용된 것이다. *공평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 위험 부담의 원칙*

㉢. C에 의하면, 소유권은 사유 재산권의 대표적인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권리이다. *소유권*

㉣.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는 A, B, C로 인해 현대의 사법 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보통의 / 대체로 적용 X*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리 ⑤ 다, 리

Comment: 법에서 가장 원. 그러나 권리 범위를 구 내용 받아야 함!

이 문제지에 관한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건관계 - 대물변화>
 자전거 여행을 계획하던 갑(17세)은 법정 대리인 을에게 자전거 구매 허락을 받고 병이 운영하는 자전거 대리점에 갔다. 갑이 병에게 을의 동의를 제시하고 마음에 드는 자전거를 선택하자, 병은 브랜드를 속여 가격을 높여서 불렀고 갑은 구입하기로 하였다. 병은 갑에게 여행 출발 전날까지 자전거를 배달해 주기로 약속하였지만, 병의 실수로 자전거가 배달되지 못해 갑은 여행을 가지 못했다.

<보기>
 ㉠. 갑은 사기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갑은 병에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을은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병은 갑에게 매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합의를 촉구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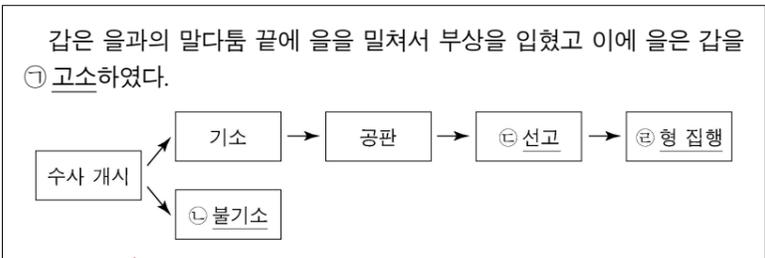
12.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재산관계 - 불법행위>
 ○ A는 출장을 가면서 자신의 애완견을 B가 운영하는 애견 호텔에 맡겼다. B가 A의 애완견과 산책하던 중 실수로 목줄을 놓친 사이에 애완견이 행인 C의 다리를 물었고 C가 애완견을 걷어차 다치게 하였다.
 ○ 갑(14세)이 망을 보는 사이 을(14세)과 병(16세)이 골목길에 주차된 정 소유의 수입차에 올라가 장난을 쳐 2천만 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보기>
 ㉠. B는 애완견을 다치게 하지 않았으므로 A에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C에 대한 B의 불법 행위 책임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A는 C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정에 대한 갑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을과 병은 정에게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 정에 대한 을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을의 법정 대리인은 정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3. 다음은 갑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은 을이 법원에 갑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② ㉢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행해질 수 있다.
 ③ ㉠ 단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더라도 형벌 이외의 보안 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
 ④ ㉠ 단계에서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한 때 형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⑤ ㉡ 단계에서 갑은 형기 만료 이전이라도 보석 결정에 의해 석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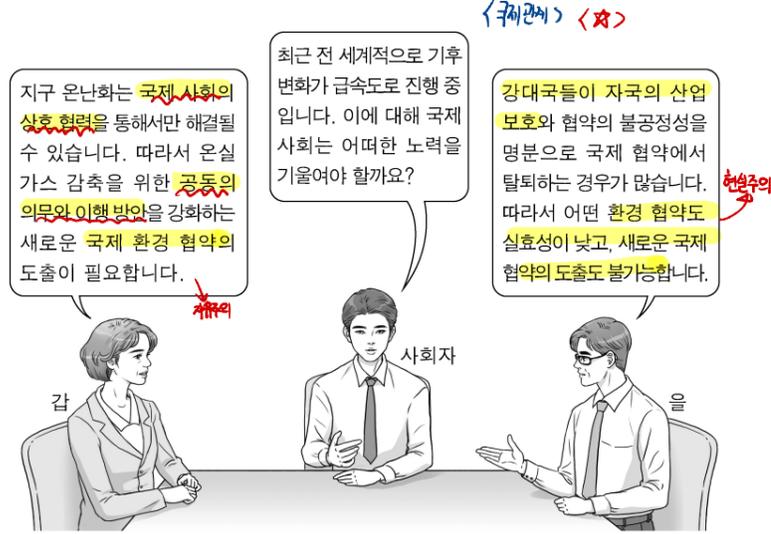


14. (가)~(마)의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가족관계 - 조양육>
 (가) 갑과 을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을 하고 이듬해 을이 딸 A를 출산함.
 (나) 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갑과 을은 소송을 통하여 이혼하였고 A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을이 행사하기로 함.
 (다) 을은 병과 만나 혼인의 실질적 요건만 갖추고 공동생활을 하면서 B를 출산하였고, 병이 B를 인지함.
 (라) 가정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병이 A를 양자로 입양함.
 (마) 병은 출장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별도의 유언은 없음.

- ① (가)에서 갑은 을이 혼인 전에 형성한 을 소유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② (나)에서의 소송은 다른 민사 소송과 달리 3심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다)에서 B는 혼인 외의 생자이지만, 병은 B에게 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라)로 인해 갑과 A의 친자 관계는 종료된다.
 ⑤ (마)에서 A가 상속을 포기하면 을과 B가 공동 상속인이 된다.

15.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보기>
 ㉠. 갑의 관점은 도덕적 규범에 따른 외교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고 본다.
 ㉡. 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이 거부권을 갖는 것은 ㉠의 관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 을의 관점은 을과 달리 자국의 안보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 을의 관점은 갑과 달리 국가 간 힘의 균형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전쟁 억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4 (정치와 법)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위가 **형벌에** 해당하여야 한다. A는 형벌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행위 유형을 법률에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A는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만약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경우에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죄형 법정주의의 구체적 원리 중 B가 위반한다.** 죄형 법정주의의 다른 구체적 원리인 **유죄 추정의 원칙** 관련 사안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데도 유사한 사안을 규정한 법률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① A의 유형화를 통해 형벌의 보장적 기능이 구현된다.
- ② A에 해당하면 심신 상실자의 행위라도 범죄는 성립한다.
- ③ B는 형벌까지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④ C는 B와 달리 입법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다.
- ⑤ B, C 모두 실질적 의미의 형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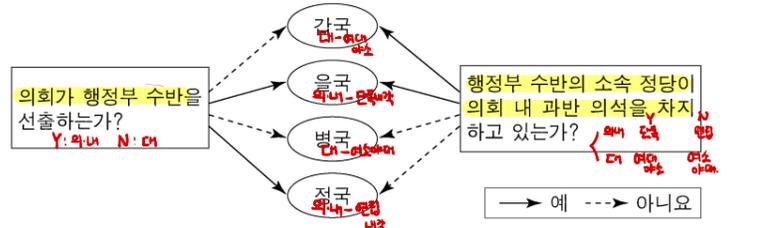
□□ 의류 회사 노동조합은 ① 단체 교섭권을 행사하여 근로 조건에 관해 사용자 측과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적법하게 쟁의 행위를 하였다. 다음은 최근 사용자에 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갑, 을, 병의 상황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구분한 것이다.

질문	갑	을	병
적법한 쟁의 행위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아니오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습니까?	예	예	예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였습니까?	예	예	아니오

* 갑, 을, 병 모두 □□ 의류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음.

- 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을 가진다.
- ② **합의** 근로관계 종료 사안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다.
- ③ 갑, 을은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거쳤다.
- ④ 갑, 을은 병과 달리 사용자에 의해 정당한 근로 3권 행사가 침해되었다.
- ⑤ 갑, 을, 병의 해고에 대해 □□ 의류 회사 노동조합도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18. 그림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단, 갑국~정국의 정부 형태는 각각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중 하나이다.)



- ① 갑국과 달리 을국은 행정부 수반이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가진다.
- ② 을국과 달리 병국은 행정 권력이 의회의 신임을 받는 동안에만 유지된다.
- ③ 병국과 달리 정국은 의회 의원이 각료를 겸직할 수 있다.
- ④ 갑국에 비해 병국은 행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법률 제·개정이 용이할 것이다.
- ⑤ 을국과 달리 병국, 정국은 연립 내각이 구성된다.

19. 국제법의 법원(法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와 B는 각각 국제 관습법과 조약 중 하나이다.)

A와 B는 각각 별도의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 별개의 법원(法源)이지만, 양자의 성립과 적용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미 존재하는 A의 내용을 명문화하려는 목적으로 B가 탄생하는 경우도 있고, 형성 중이던 B가 A의 탄생을 계기로 결정적으로 확립되기도 한다. A는 이를 승인한 당사국에 대하여만 법적 구속력을 지니지만 그 내용이 국제 사회에서 절대 다수 국가의 호응을 얻는다면 B로 발전해 비당사국에게도 법적 구속력을 지니게 된다.

-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A는 우리나라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 ② A는 국가 간의 합의이므로 국가와 국제기구 간에는 체결할 수 없다.
- ③ B는 법적 확신과 관계없이 국제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관행만 있으면 성립한다.
- ④ A는 B와 달리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 ⑤ B는 A와 달리 그 내용과 성립 시기가 분명하다는 특징이 있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의회 의원 정수(定數)는 5명이다. 현재 갑국은 5개의 선거구에서 선거구마다 최다 득표자 1인을 의원으로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선거를 앞두고 의원 정수는 유지하면서 현재의 선거구제인 **5인(7자)**을 **비례(비례제)**로 변경하여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고자 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적 수준의 한 선거구에서 5명의 의원을 선출하며,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에 배분한다. 아래 표는 현행 선거 제도에서 실시된 갑국의 의회 의원 선거 결과이다.

<정당별 득표 결과> (단위: 표)

선거구	정당	A당	B당	C당	D당	합계
선거구 1		160	140	80	20	400
선거구 2		90	270	220	20	600
선거구 3		135	120	35	10	300
선거구 4		120	180	80	20	400
선거구 5		125	100	45	30	300
합계		630	810	460	100	2,000

* 유권자 1인은 1표를 행사하고, 전체 유권자 수는 2,000명임.
 ** 개편안의 경우 위 표를 근거로 차기 선거 결과를 판단함.
 *** 개편안의 경우 각 정당 득표율에 의석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整數)만큼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잔여 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서대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함.

- ① (가)는 (나)에 비해 군소 정당의 난립 가능성이 높다.
- ② A당은 선거 제도가 개편되는 경우 의석수를 확보하는 데 현행보다 유리하다.
- ③ B당은 현행 선거제도의 의석수와 개편 이후 의석수가 동일하다.
- ④ C당은 선거 제도가 개편되면 사표가 많이 발생하여 현행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화된다.
- ⑤ D당은 현행 선거제도에서 과소 대표되었지만 개편 이후 과대 대표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